

시선

사설

서로 미루다 파국에 파국 학생·교수·직원 행동하라

한때 파행을 맞았다 겨우 재개된 총장 선출제 실무 회의가 이번에는 범인에 의해 또 다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범인은 지난 회의에서 향후 논의에 범인은 참석하지 않으며, 대학이 총장 선출제 논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현 총장 임기가 막바지인데 아직까지 제도 논의 단계에서부터 논의를 하겠다, 말겠다 수준에서 활기찬부 하는 형국이다. 아니, 파국이다. 제도 개정의 권한을 가진 범인의 이러한 선언은 무책임한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범인이 초강수를 두며 총장 선출제 개정 논의의 판을 흔들고 있지만 대학평의원회는 휘둘리기만 하고 행동에는 소극적인 모양새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가 지난 11일 총장 선출제 학생간담회를 열고 학생 구성원의 의견을 모으고자 한 것이 거의 유일하다시피하다. 시기상으로 학생간담회가 파국에 앞서 진행된 것이긴 하나, 문제는 학생간담회조차 그것으로 그쳤다는 데 있다.

더욱 개탄할 일은 간담회 자리에서 있었던 대표자의 발언이다. 학생의 참여도가 너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한다든지, 이로 인해 학생사회 분열이 발생하면 안 된다든지 하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말을 하고 있다.

지난 여름 서울캠 총학이 재선거를 통해 뒤늦게 임기를 시작하면서도 실제로 오랜만에 전학대회를 열고, 대학 층에 학생 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다. 이를 보며 행동하는 학생회를 기대했는데, 정작 그간의 요구를 관철시킬만한 권한이 있는 자리, 즉 총장을 선출하는 일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생각을 자울 수 없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한다. 서울캠 총학이 학생간담회라도 열고 움직임을 보였기에, 무언가 일갈할 근거를 제공했기에 이 같은 쓴 소리도 가능하다.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하는 다른 구성원은 무얼 하고 있는가.

지난 사설에서 ‘휴먼파워’가 있어야 개정이 의미를 갖고 움직인다고 주장했다. 개강 첫 주라는 골든 타임을 놓치고, 추석 연휴 전 제도 개정의 마지막 적기마저 놓칠 위기에 처한 지금의 상황을 돌아봐야 할 것은 다름 아닌 구성원 자신들이다. 그저 때를 기다리다 지금의 상태에 봉착한 모습을 보니 안타까울 뿐이다.

2014년 연말, 조인원 총장의 3연임이 결정됐을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범인은 ‘합법적으로’ 총장 선임을 진행했다. 일이 끝난 뒤에야 각 구성원들은 ‘밀실 선출’이라 비판하며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 선임 과정을 소명하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조 총장 본인도 3연임 후 우리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총장선출방식에 대한 논의를 이사회에서 진행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4년 동안 그 적절한 시기가 없었던 것인가. 4년이면 세대가 갈리는 학생사회는 차치하고서라도, 직원과 교수는 4년 간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또다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우리를 대표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를 지난 시기를 통해 돌아봐야 한다. 각 구성원의 구체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바이다.



대학은 지금

학내 재정·정치 문제 가시화

안나연 기자 na@khu.ac.kr

중앙대 노동조합이 ‘초과근로수당 미지급’과 ‘노조 동의 없이 개정된 연봉체규정’에 관련해 대학본부를 상대로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노동조합, 일방적 급여규정 개정에 단체 행동 예정/중대신문, 2018.9.3) 노동조합은 대학본부와 “지난 2012년 포괄산업임금제를 통해 20시간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춘섭 노조위원장은 “대학본부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의지를 표하면 협상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먼저 손 내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세의료원이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 송도세브란스 병원과 미래관 건립을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재정적인 우려가 있었다.(세브란스 ‘몸집 불리

만평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이 주의 주제 - 중도탈락율 감소를 위한 유학생 지원

유학생 지원 ‘더 세심히, 더 가까이’

박소영 기자

notold@knu.ac.kr

외국인 유학생과의 생활은 이제 일상이다. 사실이 말이 별로 와 달지 않았다. 기자가 속한 단과대학에는 유학생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학생이란 버스정류장을 지날 때 만나는, 교양과목에서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옆, 옆 조의 아이들이었다.

이들에 대해 별로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 이번 유학생 기사를 맡게 되면서, 우리학교에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다니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또 외국인 유학생과 직접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들을 알고 많은 교감을 나눌 수 있었다. 그래서 정든 가족들과 고향을 떠나 한국에 꿈 하나 안고 온 용감한 유학생이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 유학생을 위한 제도나 프로그램이 미흡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우리학교는 유학생들이 그간 가장 어려움을 많이 호소한 언어 문제 해결을 돋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운영하고, 한국어 수준이 높은 유학생을 뽑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 유학생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국어 심리 상담과 멘토링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제도들이 유학생에게는 잘 전달되진 않은 것 같다. 국제캠퍼스(국제캠) 국제교류처는 학생

들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알고 있는 학생은 매우 드물었다.

유학생도 마음을 놓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유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를 표현하기보다는 무작정 좋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 말을 한국 학생들이 액면대로 받아들여 깊은 실상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제로 만나본 유학생들 역시 힘들다고 말하기보다 괜찮다,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기 단톡방의 존재를 몰라 1년이나 단톡방에 초대되지 못했던 게 과연 괜찮았을지는 의문이다. 학교에 어떤 건물과 시설이 있는지, 어떤 제도가 바뀌고 어떤 행사가 있는지 공지를 받지 못했어도 좋았을까? 티지에 혼자 고립된 채 생활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모국이 아닌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는 것 자체도 힘들었을 텐데 말이다.

유학생에 보다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때다. 국제캠 국제교류처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교육 수월성 제고 TF’를 만들고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유학생을 많이 접하는 각 단과대학별 교수로 구성됐다. TF 규모가 커지면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들도 포함시켜 본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무엇보다 우리도 외국인 유학생의 괜찮다, 좋다는 말을 그들의 입장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외국인 유학생들끼리만 몰려다녀요.” “그들만의 세계가 있어요”가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과 우리가 더 함께 어울리고 더 함께 공부해 나가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되기를 바란다.

기’에 커지는 우려/연세춘추, 2018.9.2) 2020년 건립을 목표로 공사 중인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엔 3,500억 원이,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에는 약 2,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규모 재정 사업을 동시에 병행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외연 확장 보단 연구 지원 등 내실에 신경썼으면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강대 제47대 총학생회(총학) 강범석 회장과 박의빈 부회장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총학생회장단 전격 사퇴 표명…“고민 많았다”/서강학보, 2018.9.5) 강 회장은 “학제개편 대응 미숙,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독단적 진행으로 인해 회장단 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심경을 전했다. 회장단의 공석으로 인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할 가능성성이 높아졌다.

지난 4일 고려대 서울캠퍼스 총학 김태구 회장이 총장직선제 촉구를 위해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총장직선제 촉구 학생 공동행동 시작/고대신문, 2018.9.10) 2018학년도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임시회의에서 ‘총장의 민주적 선출을 위한 전체학생대표자 공동행동’이 의결됨에 따라 진행됐다. 총학은 “총장선출제도 개

정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할 수 없다”며 “구성원 의견을 온전히 반영할 수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단식 3일째인 6일엔 정문에서 능성 집회도 열렸다.

이화여대에서 지난 학기 시범 운영체제로 도입된 ‘학부 성적 교수 자율평가’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처음 도입된 ‘교수 자율평가’, 이제 반 왔다/이대학보, 2018.9.3) 해당 제도는 담당 교수가 자율적으로 성적 평가 방식을 운용하게끔 한 것이다. 한 학기 시범 운영을 마치고 일각에선 “완화된 상대평가로 성적 자체는 올랐으나 석차는 그대로”라며 ‘학점 인플레이션’을 우려했다. 대학본부는 “제도의 효용을 판단하기 이르다”고 답변했다.

한양대에선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해 2학기에 입학한 신입생이 다른 학생들 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점수 학번’ 재외국민의 고충, 학교와 학생 모두의 노력 필요해/한대신문, 2018.9.3) 보편적으로 3월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환영회를 통해 선배와 교류하며 대학 생활의 정보를 얻는다. 그러나 9월 신입 학생은 상대적으로 정보 습득, 친목 도모에서 제한된 기회를 가지며 전공 수강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속도의 논리는 멈출 줄 모른다

세시봉

안나연 (서울뉴스팀장)



장애증후군 당사자로서 〈거부당한 몸〉을 쓴 수전 웬델은 장애를 규정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삶의 속도’를 언급한다. 삶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는 자연히 효율성을 좇는다. 그러다보면 장애인이 가진 특징은 ‘속도에 맞출 수 없는 결함’으로 여겨지고, 사회적 차별이 당연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조금 느려도 더 많은 구성원과 같이 걷기보단 빨리만 가려고 하는 것 같아 아쉽다.

지난 2일 강서구에 특수학교 설립이 결정됐다. 학교 과정에 대해서 “장애인 학생의 교육권을 협상 카드로 활용했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지난 2017년 무렵까지 끊어가며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한 학부모에겐 다행인 소식이다. 그러나 나는 특수학교가 궁극적으로 없어야 한다고 믿는다.

현재로선 특수학교의 설립이 최선으로 보인다.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있는 학급은 통합학급이라 하며 통합교육을 받는다. 이 학급에 속한 특수교사는 교수내용을 일부 수정하며 장애 학생을 포함한 수업 구성원의 이해를 돋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엔 특수교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거나,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통합학급에 비장애·장애 학생이 함께 존재해도 장애 학생은 별도의 지도를 받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다수의 학부모가 자녀에게 특수학교를 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학교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을 분리해서 가르친다. 사회적인 가치관을 습득하는 시기부터 별개의 공간에서 분리되어 수업을 받다 보면 심리적인 거리감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일전에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를 다녀온 시각장애인은 “사람들이 장애인과 직접적으로 조우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아기취급’을 하거나 아예 무시한다”고 말한 바 있다. 차별을 의도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심리적 거리감이나 무지에서 기인한 의도치 않은 차별은 ‘분리교육’을 받은 세대 내에서 빈번할 수밖에 없다.

계기판의 숫자가 올라가다 보면 풍경도, 뒤에서 걷는 이도 지나치게 되기 마련이다. ‘빨리’만 추구하는 사람에게 느리게 걷는 동행인은 걸림돌일 뿐이다. 우리는 느린 속도로 걷는 이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속도에 맞추지 못하는, 어떠한 처치가 필요한 문제로만 인식한다. 이런 인식 속에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로 둔갑해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은 학업 이해의 속도가 달라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게 되는 것이다. 빠름과 느림을 가르고 느림을 배제하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의 논리로 세상을 보다 보면 나 역시 언젠가는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는 특수학교가 더욱 많아지는 것에 반대한다. 피상적으로 나도 지난 4년간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던 사람들과 같은 모양새의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배척의 논리로 말한다면, 나는 포용의 논리다. 우리가 ‘빨리’를 죄기보단 ‘같이’를 추구하며 속도를 늦출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나누기 보단 더하기를 통해 느리면 느린 대로 괜찮은 세상을 만들길 바란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쪽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조영숙 | 편집장 최평규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희대로 26(회기동)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nu.ac.kr | 이메일 khnews@kn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경희대학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희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